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국가 재원 확보 및 대응 전략

## I. 서론 탐구 동기

본 탐구는 개인적인 주식 투자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투자 과정에서 한국 주가지수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 원인을 한반도의 휴전 상태나 비기축통화국 지위, 국가 신용등급 문제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인 자료 조사 과정에서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경제 전반, 특히 국가 재정과 장기 성장 전망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약 0.78명,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 이상, 고령자 비율은 약 40%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는 연금, 의료, 복지 지출의 급증과 세수 기반 약화를 동시에 초래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진로시간에 읽은 “데이비드 본스타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 사회 문제를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해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책, 재정 측면에서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 주가지수가 선진국 대비 낮게 평가되는 여러 요인(휴전 상태, 비기축통화국, 대기업 수출 중심 구조, 저출산/고령화) 중에서도 본 탐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설정하여 본 탐구를 진행하였다.

## II. 탐구 과제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 재원이 어떤 구조로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 국가 예비비를 포함한 재정 운용 방식이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 기존 저출산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 국가 재원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III. 이론적 배경

국가 재정은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 재정 수지, 세수 구조를 통해 평가된다. 기축통화국은 통화 발행을 통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재정 건전성과 지출 효율성이 더욱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이러한 재정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동시에 고령 인구 증가는 연금·의료, 복지 지출 확대를 요구한다.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것은 결국 다시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예측 가능한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재정 운용은 예비비를 포함한 단기 대응성 지출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 점이 정책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가 재원과 부채, GDP 대비 부채비율, 재정 건전성 개념은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고 국민 복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재원은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으로, 주로 세금(국세, 지방세), 국채 발행, 공기업/기금 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부채는 이 재원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빌린 돈(국공채)이며, 너무 많아지면 국가 신용이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커져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다. 이는 정부 총부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국가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6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지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 약 48~54% 수준으로 OECD 평균(약 100%) 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125%를 넘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데, 이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빚이 많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자를 갚고 원금을 줄여갈 수 있는지, 복지, 투자, 성장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개념이다. 재정 건전성이 좋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이자 비용이 줄고, 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투자와 성장이 촉진된다. 반대로 재정수지가 계속 적자라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세금 폭탄이나 복지 삭감,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재원 운용 차이는 극명하다고 볼수 있는데 기축통화국(미국)은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통화를 무제한 찍어낼 수 있다. 그래서 부채가 125%를 넘어도 세계 각국이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사들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게 유지되고, 재정 위기가 쉽게 오지 않는다. 이를 ‘막대한 특권’이라고 부른다. 반면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원화가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내면 환율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터진다. 그래서 세수(세금)를 최대한 늘리고, 국채를 신중하게 발행하며, 재정 건전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부채가 조금만 늘어도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외환위기 위험이 커진다.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라 환율 변동에 특히 취약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을 50% 이내로 관리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 재원과 경제 성장, 복지 지출, 세수 구조 사이의 상관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얹혀 있다. 재원(세수)이 충분하면 정부가 인프라/R&D/교육에 투자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이 너무 높아지면 민간 기업·개인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성장이 둔화된다(래퍼 곡 선 효과). 복지 지출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여 장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지만, 과도하면 세금 부담을 키워 단기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북유럽처럼 복지 지출이 많아도 성장률이 안정적인 나라는 세수 구조가 소비세·부가가치세 중심이라 투자 저해가 적은 반면, 소득세·법인세 중심인 나라는 기업 투자와 근로 의욕을 꺾어 성장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세수 구조가 소득세·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장 둔화 압력이 있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앞으로 10년 안에 폭증할 전망이라 재원 확보와 지출 효율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가 재원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복지, 세수 구조가 균형을 이루는 전체 시스템이다. 기축통화국처럼 유연하게 쓰는 게 불가능한 한국은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도, R&D·인프라·청년·가족 지원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 저출산 이론(?)

한국의 극단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단순하게 경제가 ~해서 이렇다 라는 형식 이유 하나로 설명되지 않고, 여러 층위의 사회·문화·경제적 요인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본다 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핵심 이론은 ‘2차 인구 전환 이론’이다. 이는 198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1차 인구 전환(사망률 급감 -> 출산율 감소)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로, 개인주의, 자기실현, 자율성 중시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한국에서는 21세기로 변화하면서 이 변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학력, 경제활동참가 급증, 결혼,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경력단절, 시간,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인식, 그리고 “자녀 없

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산 자체가 선택지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설명은 ‘경쟁압력과 불확실성, 불안 이론’이다. 한국 사회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교육·취업·주거·승진 등 모든 영역에서 극한 경쟁이 일상화됐고, 실패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안전망 없는 사회’ 구조가 고착됐다. 이런 환경에서 결혼과 출산은 시간·돈·에너지 를 쓸아부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되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사교육비·집값 폭등,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 경력단절 공포가 이 불안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세 번째는 계리 베커의 가계생산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기회비용, 양육비용 이론’입니다. 자녀 양육을 일종의 ‘투자’로 보는 관점에서, 한국에서는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교육비/주거비/시간비용)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얻는 편익(노후부양, 정서적 만족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결국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녀 0~1명”이 최적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 육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효과가 더욱 증폭됐다.

## IV. 연구 방법

### 통계 자료 분석

국가 통계, 언론 보도 자료, OECD 및 UN 인구 통계를 참고하여 출산율, 고령 인구 비율, 고령자 빈곤율 등의 지표를 분석하였다.

### 정책 및 사례 조사

한국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국가 예비비 운용 사례를 조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과 비교하였다.

### 자료 기반 정성 분석

국민청원, 정책 제안 자료, 발표 슬라이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구조적 원인을 도출했다.

## V. 탐구 결과

### 1.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재원 부족이라기보다 재원 배분 구조임이 확인됨

본 탐구를 통해 확인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그냥 국가 재원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재원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점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과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근접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0.78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재정 규모 자체보다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방향성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국가 예산 중 예비비와 같은 재량 지출 항목은 명목상 ‘긴급 대응’이라는 이유로 장기적 구조 문제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국가가 실제로 필요한 예산에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사전적,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2. 국가 예비비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 예비비는 연간 약 3~4조 원 규모로 편성되지만, 실제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용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예비비는 주로 재난, 경기 충격, 단기적 민원 대응에 집중되어 사용되었으며, 장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매년마다 예비비가 사용되는 것은 예산안에

10%이내에 불과 했고 그 10%안에서도 고위 관료자나, 국회위원등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썼다는 뉴스도 볼 수 있었다. 이 점은 예비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돌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예측 가능한 문제임에도, 예비비 운용 체계상 ‘긴급성’ 기준에 가로막혀 재정 투입이 배제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단기 현금 지원이나 일회성 사업에 반복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그것의 정책 효과의 한계를 초래하였다.

### 3. 현금 지원 중심 정책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이 확인됨

기존 정책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 분석한 결과, 출산 장려금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체감 효과는 있으나, 출산 결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금액이 확대될수록 정책 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한계 효용 체감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반면 성균관대 논문에 따르면 현금 중심의 양육비 지원보다 주거 안정, 보육 인프라, 일가정 양립 환경과 같은 구조적 요소에 대한 투자는 출산율 개선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산이 단순한 경제적 보상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선택임을 의미한다.

### 4. 지역별 출산율 격차는 정책 실패의 결과임이 드러남

탐구 결과, 지역별 출산율 차이는 문화적 요인보다는 경제, 인프라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은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과도한 경쟁 환경이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와 의료, 교육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국 단위의 획일적 지원 방식에 머물러 왔다. 이런 정책은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 투입 대비 출산율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 5. 장기 투자 단절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마지막으로, 정권 교체에 따라 R&D와 미래 산업 관련 장기 프로젝트가 반복적으로 축소·중단되는 현상이 저출산 문제를 간접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안정적인 고급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이는 혼인 및 출산 시기의 지연으로 연결된다. 한마디로 저출산 문제는 복지 정책의 실패만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부족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1.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R&D 예산 확대

해결 방안으로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한 R&D 예산 확대 정책을 제안한다. R&D 투자는 단기간에 출산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출산 결정의 기반을 형성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R&D 예산 확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정책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 2. 국민청원을 통한 국가 예비비 구조 개편

두 번째 대안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국가 예비비를 축소하고, 장기 구조 대응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6예산안에도 예비비가 올해보다 더 증가한다고 하는데.. 예비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용 재원으로 의무 배정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예산이 단기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사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어려움과 극복

이 탐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 그리고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데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통계는 매년 빠르게 변한다는 점, 2025년 말 현재 최신 공식 데이터(통계청, 기획재정부, OECD 보고서)가 일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예측치에 의존해야 했다. 예를 들어, 2025년 출산율 0.78명이나 예비비 규모 2.4조 원은 최근 발표된 수치지만,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장기 추세를 분석할 때 불확실성이 컸다. 또한 저출산의 원인이 가치관 변화, 경제 비용, 사회 구조, 지역 편차 등 여러 층위로 얹혀 있어서 하나의 이론이나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특히 청원 슬라이드 자료처럼 “예비비 낭비” “돈 뿌리는 곳이 이상하다”는 비판은 감정적 공감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즉 내가 해결하고 싶은 방안이 너무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탐구 중에 계속 들어서 혼란을 겪을 때가 많았다.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하면서 현실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맞추는 게 힘들었다. R&D에 5조 원 올인하자는 제안은 이상적이지만,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권, 정당, 이익집단 간 충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웹 검색과 AI 플랫폼 키워드 검색(‘저출산 정책 2025’, ‘예비비 저출산’ 등)을 활용해 실시간 최신 자료를 수집했다. 여러 출처(통계청, 한국은행, OECD, 뉴스 기사, 청원 원문)를 교차 검증하며 왜곡을 최소화했다. 무엇보다 청원, 슬라이드 원문을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감정적 비판을 객관적 데이터와 이론으로 연결하려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자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쓰는 방식이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었다.

## 3. 배우고 느낀 점

이번 탐구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은 “인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 생존 문제라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왜 한국 주 가지수가 저평가되나?”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파고들수록 이게 그냥 기업에 실적만을 토대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가치관, 사회 구조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원과,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380조 원 썼는데 출산율 0.72명?”, “예비비 2.4조 원은 어디 가고, R&D는 왜 칼질 당하나?” 같은 외침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정부가 장기적인 미래를 안 보고 단기, 선심성, 정치적 예산만 쓴다는 깊은 실망이었다. 나도 처음에는 “그냥 돈 더 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분석하면서 현금 지원보다 인프라/주거/교육 R&D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와, 정권 바뀔 때마다 장기 프로젝트가 잘리는 현실을 알게 되면서 정책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은 작은 행동 하나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인 내가 국민 참여 예산 포털에 청원을 올리고, 이렇게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비록 아직까진 나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볼 순 없지만 현재에 내글을 읽은 누군가가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정부 고위직인 사람인 줄 누가 아는가? 나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걸 배웠다.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건 “10년 뒤, 앞으로 미래에 후회하지 않으면 지금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는 과감한 것을 싫어하고 오로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탐구를 통해 안정적하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R&D, 인프라, 청년/가족 지원에 과감하게 올인하지 않으면, 2035

년·2040년에는 진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나는 그때 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번 탐구는 동아리에서 해야하는 과제이기도 했지만 미래 후생들을 위해, 그리고 나  
를 위해 한번 쯤은 생각해봐야할 주제라고 생각했고 나 자신과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었  
던 것 같다. “우리는 정말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공부하고, 행동하려고 한다.  
Make Korea Great Again 처음엔 낯선 슬로건처럼 느껴지겠지만, 이제는 내 다짐이 됐다.  
고출산의 날이 다시 빛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자랑인 나라, 청년들이 미래를 두려워하  
지 않고 부모가 되는 걸 기대하는 한국,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  
겠다. 목소리 내고, 공부하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계속하겠다.  
이 문구는 나의 버킷리스트, 체크리스트 중 하나로 우리가 만들어갈 약속이기도 하다